



* 지난 4월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태극기달기범국민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연합뉴스

진영의 재구성과 민주주의

글 이선태 민주누리 기획위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관리실장
lst@kdemo.or.kr

‘3+3’의 정당 배열

87년 6월민주항쟁 30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이 요동치고 있다. 지난해 가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촉발된 10월 29일 1차 촛불시위는 20차까지 이어졌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촛불정국은 막을 내린다. 5월9일 19대 대통령 선거로 지난해 가을부터 6개월 동안 계속된 격랑은 종점을 맞는다. 이로써 ‘87년 체제’는 확실하게 ‘2017년 체제’로 이행할 것이다.

국회에 한 석 이상의 의석을 갖고서 19대 대선에 참여하는 정당은 6개 정당이다. 박근혜 정부에서의 여야 개념을 통해 분류하면 ‘3+3’의 형태를 보인다. 정의

당, 민주당, 국민의당이 기존의 야당이고, 여당은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으로 새롭게 분화했다. 한국의 정당체제 스펙트럼을 진보와 보수, 혹은 좌파와 우파라는 개념으로 분류하는 일은 늘 논쟁과 이견을 수반한다. 유럽이나 영미의 역사적 개념이기에 정치학적으로도 이를 한국사회에 적용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더군다나 여전히 ‘중복좌파’라는 레토릭이 성행하는 상황에서는 더 그렇다. 개념의 상대성을 염두에 두고 단순하게 분류하면 기존의 진보진영(좌파)에서는 정의당이 가장 왼쪽이라고 할 수 있겠다. 스스로도 유일한 진보정당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문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다. 이들을 진보 혹은 좌파정당이라고 부르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다. 전통적인 보수야당을 뿌리로 하지만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포괄하고 있기에 진보적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하다. 분명한 것은 이들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분화된 계기는 지역과 계파 차이였으나 촛불정국을 거쳐 대선정국에 와서 국민의당이 민주당에 비해 확실하게 중도지향적 경향을 정책과 공약에서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안철수 후보는 국가의 경제개입에 대해 소극적이며 시장과 기업의 자율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보수의 재구성과 태극기

촛불시위의 대척점에서 이른바 ‘태극기 집회’가 새로운 사회현상으로 등장했다. 태극기 집회는 현재의 파면 결정을 전후로 한 3월 초에 최고조에 달했다가 박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많이 잦아들었고 지금은 ‘새누리당’을 통해 정치세력화를 꾀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등장으로 보수진영은 세 개의 정당으로 분화되었다. 자유한국당을 전통보수라고 한다면 새누리당은 현재의 파면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 극단보수, 바른정당은 공정한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기에 개혁보수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위기의 절정은 최순실사태가 촉발한 촛불정국이지만 그 기원은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사건’이다. 박근혜 정부는 51.6%의 지지를 받아 출범하지만 출범 후 1년여 지난 상황에서 발생한 세월호 사건으로 엄청난 국민적 도전을 받는다. 1단계 보수진영의 분화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일종의 국가적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국가기구의 위기 대처가 매우 미흡했고, 대통령 스스로가 정서적으로 국민과 공감하는 데에 실패하면서 박

근혜 정부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 보수의 중요한 가치는 책임감이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에 확실한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그 국가를 운영하는 권력의 정당성은 의심될 수밖에 없다.

2단계 보수진영의 분화는 2015년 가을부터 시작된 ‘국정교과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한국사 교과서를 기존의 검인정체제에서 국정교과서로 바꾸려는 시도는 보수진영 내에서도 적지 않은 반발을 불러왔다. 검인정교과서 체제는 기본적으로 자유



* 2016년 12월 9일 청와대가 해명용으로 게시한 ‘세월호 7시간’ 구명조끼 발언 영상 화면 캡처

주의적 경쟁체제에서 교과서 선택권을 자율적으로 교육주체에 부여하는 제도이다. 교학사 교과서 파동을 한 차례 겪은 상황에서 국정교과서 정책은 동의와 설득이 부재한 정책이었다. 당과 정부의 동의도 제대로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청와대만 독주하는 상황은 광범위한 중도보수와 개혁적 보수의 이반을 가져왔다.

3단계 보수진영의 분화는 2016년 4월, 20대 총선에서 극명하게 발생하였다. 새누리당은 극심한 공천 파동을 겪은 후 총선에서 참패하였고 이후 내홍은 극에 달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2012년 19대 총선을 통해 MB계 상당수를 털어내면서 친박 그룹이 확실하게 주도하는 모양새를 만들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탄생시킨 대선 이후 극심한 계파 갈등을 겪었고 이것이 총선에서 공천파동으로 이어졌다.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새누리당은 탄핵찬반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었고 탄핵 주도 세력은 탈당 후 바른정당을 창당한다.

촛불과 진보의 재구성

촛불집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히 세계사적 의의를 갖는다. 동서고금의 인류 역사상 이 정도의 인원이 정치적 목적을 갖는 평화집회를 지속시킨 적은 없었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획득한 51.6%의 지지자 중 불과 5%만 남고 35% 이상은 탄핵을 지지하고 촛불집회에도 참가했다고 추측된다. 촛불집회는 진보진영이 주도하였지만 중도층은 물론이고 보수진영의 상당수도 참여한 범국민적 성격을 갖는다. 여기서 '촛불민심'을 자의적으로만 규정하려는 정파적 접근은 한계를 갖는다. 촛불은 범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는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것이고 민주주의적 보편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을 요구한 것이다. 대선 이후 진보진영은 무엇이 적폐이고 어디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인지를 놓고 심각한 논쟁



* 탄핵 선거 후 첫 주말인 지난 3월 11일 서울 광화문광장 촛불집회에 가족과 함께 참석한 어린이 ©연합뉴스

에 직면할 것이다. 이 결과에 따라 새로운 진보진영의 재구성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 논쟁의 지점이 있겠지만 다음 세 가지를 꼽아본다. 첫째는 '노동의 경제민주화' 문제이다. 노조조직률이 10%에도 한참 못 미치는 상황에서 '조직된 노동자' 중심의 노동정책은 노동시장의 비정상적 분절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위치한 사회경제적 지점이다. 경제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비정규직 문제 등 경제적 양극화와 청년 실업 등의 문제는 여야와 보수 진보를 떠나서 모두가 공감하는 당면의 문제다. 진보진영 누구나 공감하지만 누구도 꺼내지 못하는 '과잉 대표된 상층 노동자'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2014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기아차 광주공장

의 정규직 평균연봉은 9700만 원, 사내하청은 5000만 원, 1차협력사는 4700만 원, 1차 협력사 사내하청은 3000만 원, 2차 협력사는 2800만 원, 2차 협력사의 사내하청은 2200만 원이다.

둘째는 미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과의 외교 문제와 북한 문제이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이미 이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전통적인 반미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것은 물론이고 막연한 친중국 정서도 탈피해야 한다. '한미 FTA'와 관련하여 트럼프 행정부는 재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에게 손해였다면 우리에게는 그동안 이익이었다는 역설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북한의 인권 문제나 민주주의의 부재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 대한 비판을 보수의 전유물로 남겨두지 말고 진보가 생각하는 북한과 통

일의 비전에 대해 설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치주의의 문제와 평화시위 등 민주주의의 보편적 원리에 대한 이해 문제이다. 촛불정국 속에서 결국 운명을 달리한 백남기 씨가 국가폭력의 희생자였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과도한 국가폭력이 30년 전에 박종철과 이한열을 앗아간 것과 마찬가지로. 하지만 2015년 11월의 '민중총궐기' 집회가 지난해의 촛불시위와 달리 폭력집회의 양상을 띤 것에 대해 보다 근본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민주적 권위에 대한 숭복과 존중은 민주시민의 중요한 덕목이다. 법만능주의나 형식적 법치주의에 머무르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민주사회에서 나타나는 불법과 폭력시위는 분명히 경계되어야 한다. 이는 일종의 부적응의 과정이었다. 진보진영은 87년 이후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등 유사민주정부를 거치면서 민주사회라는 확신이 없었기에 민주 대 반민주의 진영논리를 유지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이제는 아니다. 민주주의의 보편적 생활원리가 일상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쟁의 지점에서 과거의 태도와 생각을 고수한다면 보수적 좌파로 전락할 것이고 적극적 변화를 보인다면 개혁적 좌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련**



* 노동의 경제민주화는 새로운 진보진영이 직면한 심각한 논쟁 지점이다. 사진은 지난 2016년 12월 비정규직 조선하청 노동자들의 시위 모습 ©연합뉴스